

민주시민과 녹색 삶

박영신(연세대 명예교수, 녹색교육센터 이사장)

1. 민주스러움의 이해:

1) 사회의 짜임새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오랜 관심 가운데 하나는 ‘중간 집단’ 혹은 ‘자원 집단’이다. 국가의 권력은 점차 막강해 지고 있다.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 앞에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켜가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가의 전횡을 막고자 하고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바로 국가와 개인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 집단이고, 개인들이 공유하는 뜻을 함께 모아내기 위하여 만들게 된 자원 집단이다. 다른 말로 묶어 말하면 이 모두는 ‘시민 단체’라고 할 수 있다.

(2) 국가와 개인 사이에 이와 같은 시민 단체가 더욱 강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면 국가는 횡포를 부리기가 어렵게 된다. 이처럼 중간 집단/자원 집단이 활발할 때 민주주의도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어느 한 쪽의 생각을 일방으로 몰아가기 위하여 광범위한 의견 수렴의 기회를 열어두고 가지 않는다면 안정은 깨지고야 만다. 그러므로 안정된 민주주의에서는 다양한 집단이 서로 다투고 겨루면서도 서로 귀를 기울이는 관대함도 지켜갈 수 있어야 한다.

(3)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시민들이 주축이 된 여러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체험을 해야 한다. 선거에서 이겨보기도 하고 져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지지와 반대의 의견을 내놓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패배의 아픔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임원이 되어 조직을 이끌어보기도 하고 평회원으로서 참여하여 조직을 돕기도 하는 공공의 삶을 익혀가면서, 모두가 민주스런 품격을 가꾸어 가야 한다.

(4) 이러한 사회를 만들고 지켜가기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 오늘날의 삶이 더욱 그러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모든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국가 권력에 점차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에 맞서기란 더욱 어렵게 된다. 아무리 독재 정치를 펴도 거기에 국민이 저항하려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2) 우리의 역사 경험에서:

(1) 민주주의의 시작을 어디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멀리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특히 신라 때 부족-귀족이 모여 나라의 중요한 일을 논한 화백(和百) 회의를 민주주의의 출발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지닌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역사의 과정을 밝아 꾸준히 발전해 오지는 못했다.

(2) 조선 시대에 들어 그 시대 나름의 소통을 제도화시켜 왔다. 왕과 신하 사이에서, 집권층 사이에서, 그리고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백성이 권력층을 향하여 의견을 내놓고 발언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3)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아 민주스런 움직임이 뚜렷해지기 시작한 것은 19세기를 마감하던 때의 개화 운동에서였다. 그 보기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순 한글로 나온 신문 「독립신문」이며 그것과 떼어 수 없게 이어진 독립협회이고 여러 토론회이다. 이 모든 것은 갑신정변에 가담했던 서재필이 천신만고 끝에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를 하게 되면서 새롭게 가다듬어 펼치고자 한 자신의 뜻에 이어져 있었다.

오랜 망명 생활에서 그가 깨닫고 도달한 결론은 갑신정변이 시도했던바, 총칼을 통한 국가 전복이나 개혁이 아니었다. 그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여야 했다.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백성을 깨우쳐 오늘의 말로 하면 민주스런 시민으로 기르는 그 길 밖에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고 믿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토론회를 만들어 토론에 참여하고 토론의 방법을 익히도록 힘써 가르치고자 했다. 이러한 뜻에서 그는 1896년 4월 7일 「독립신문」을 창간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 창간호에서 그는 “우리는 첫째, 편벽되지 아니한 고로 무슨 당에도 상관이 없고 상하귀천을 달리 대접하지 아니하고 모두 조선 사람으로만 알고 조선만 위하며 공평히 인민에게 말할 터인데, 우리가 서울 백성만 위할 게 아니라 조선 전국 인민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대언하여 주려”한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정부에서 하시는 일을 백성에게 전할 터이요 백성의 정세를 정부에 전할 터이니, 만일 백성이 정부 일을 자세히 알고 정부에서 백성의 일을 자세히 아시면 피차에 유익한 일만이 있을 터이요”라고 또 썼다. 이러한 뜻으로 모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국문으로만 써서 “남녀 상하귀천이 모두 보게” 하겠다고 하였다.

이 신문은 그때의 백성이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관인의 노예가 되어 죽도록 일하여 정부에 세나 바치고 양반에게 돈이나 뺏기며” 산다며 “그건 백성이 아니요 종이니 종과 백성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가르치고 “조선 사람들은 종노릇 하는 것이 백성노릇 하는 줄로 아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이며 기막힌 일인가 하고 한탄하기도 했다.

(4) 그러나 이러한 시민 기르기 운동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우리 안의 기득권 세력에 의해 꺾이고, 뒤이어 일제 강탈 밑에 들면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꺾 빠르고 발 빠른 이들이 친일의 길에 들어서 입신출세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자주성과 자율성을 지켜온 이들은 사회의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고 표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어야 했다.

(5) 우리가 민주주의를 국가의 정책으로 익히고 교과서에서 배울 수 있게 된 것은 해방 그 다음부터였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제도화되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였다. 이른바 ‘4.19’라고 하는 <1960년 봄 혁명>은 교육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뜻을 배운 젊은이들이 그 뜻을 제대로 인식하여 비민주스런 권력을 뒤엎어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녹색 관심의 출현:

1) 국가 동원 체제의 경험:

(1)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60년대 이후의 산업화 과정을 둘러싼 견해의 불일치 때문에 열띤 논란이 빚발치고 있다. 시민 혁명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제도화시키려던 때에 일어난 군사 쿠데타로부터 군사 정권이 추진한 경제 성장의 방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실 하나는 국가가 ‘동원 체제’를 만들어 모든 국민을 그 밑으로 끌어들이었다는 점이다. 모든 것을 국가 주도로 이끌어가면서 국민의 관심과 역량을 국가가 세우는 정책에 집중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에 어긋나고 그 영역을 벗어나는 것은 단호히 억압되었다.

(2) 국가는 경제 성장을 위한 산업화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위하여 경제 성장을 절대화하였다. 경제가 발전된 다음에야 민주주의도 가능하다는 신념 체계도 학습시켜 갔다. 하여, 비록 문제가 많아 미숙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해방과 더불어 우리 사회가 맛보기 시작한 민주스러움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모든 국민은 ‘잘 살아보자!’는 경제 구호에 맞춰 그 목표를 향하여 행진해 갔다.

(3) 이제 모두가 경제 우선의 가치에 빠져 다른 가치는 부차의 자리로 떨어졌다. 경제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 이상 더 귀하고 긴박한 것은 없다는 국가 동원 체제 밑에서, 모든 국민은 그 체제에 순응하고 그 체제를 변호하고 정당화하기에 이르렀다. 민족 중흥, 조국의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모든 정책에 국민 모두는 동의하고 환호했다. 거기에 토를 달거나 이견을 내기란 매우 어렵게 된 체제였다.

2) 개발주의의 한계:

(1) 우리나라가 지향한 경제 성장의 정책은 물론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특히 냉전 체제에 접어들면서 온 세계를 뒤덮게 된 거대한 이론이고 법칙이었다. 이러한 생각의 틀을 가장 잘 표상했던 것이 로스토의 '경제 성장 단계론'이다(W. W. Rostow, W. W.,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A Non-Communist Manifesto*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0)).

(2) 우리는 모두 이 '경제 발전/성장 단계'의 논리에 사로잡혔다. 이것은 경제를 부흥시켜 '도약' 단계를 넘어 '성숙' 단계를 거쳐 마침내 '대량 소비'의 단계로 나아간다는 발전 법칙이자 신념이었다. 그때의 우리 상황은 '도약의 준비' 단계로서 곧 다가올 '도약'을 위해서 국민 모두가 총동원되어 매진해야 했다. 그 다음, 다음에는 대중이 대량 소비의 시대를 맞게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위한 국민 동원 체제는 마치 '정치 종교'처럼 확고한 신앙의 체제로 굳어져 있었다.

(3) 이러한 국가 목표는 개발주의로 나타났다. 경제 성장의 도를 더할수록 자연 생태계의 훼손도 그 도를 더해갔다. 서구와 동구 할 것 없이 산업화 과정에서 모두 생태계를 파괴해 갔다. 체제와 상관없이 모든 국가가 다 '무한한' (?) 자연을 개간-이용하여 인간의 이익을 더해 가자고 했다.

3) 녹색 의식의 도래:

(1) 지금까지 자연이란 무한한 것이라고 여겨온 지식 체계가 마침내 도전을 받기 시작하였다. 자연은 무한하지도 않을뿐더러 자연의 황폐화는 생명 자체의 황폐화를 몰고 올 것이라는 생태계 자체에 대한 위기 의식이 번지게 되었다.

(2) 성장 제일주의라는 것이 인간본위의 짧은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는 반성도 일궈 나왔다. 결국, 인간의 복지와 생명은 생태계의 한 부분이라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관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깊은 수준의 의식 변화를 요구받기에 이르렀다.

(3) 생태계의 관계성 속에서 인간의 삶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좁다란 자기를 넘어서야 한다는 새로운 인간관과 생명관을 지니고 있어야 했다. 보기를 들어,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는 후쿠시마에 사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너머 일본 전역의 사람들, 아니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인접국과 지구인 모두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과학과 기술의 막강한 힘은 역설이지만 그것이 자아내는 피해의 범위와 정도가 엄청나게 제한된 지역에 한정시키지 않는다. 원전 사고의 여파는 특정 지역과 국경을 넘어선다. 그리고 그 영향은 단 시간에 해결되지도 않는다.

3. 민주스런 녹색 시민의 삶:

1) 참여와 책임:

(1) 민주스럽다고 하는 것은 공공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공공의 영역에 참여하여 자신의 뜻과 생각을 표현하고 남의 뜻과 생각을 듣고 이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의 발현이고 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주스런 시민이란 이러한 공공의 영역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책임으로 느껴 적극의 활동을 펼치는 공동체 구성원을 말한다.

(2) 민주스런 사회의 시민은 자율성을 지닌 여러 중간/자원 집단에 회원으로 적극 참여하여 국가 영역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뒤집어, 국가 영역은 이러한 시민의 참여에 대하여 문을 열어두어야 한다. 그렇게 협력하는 것이 민주스런 관계이다.

(3) 삶의 진리는 어느 특정 인간, 특정 조직, 특정 권력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겸손의 미덕을 가지고 주요한 일을 함께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2) 녹색 시민 기르기:

(1) 경제를 잣대로 삼아 잘 산다고 하는 인간 중심의 물질주의/유물주의를 벗어나 그것으로 켤 수 없는 삶의 영역에 대하여 감수성을 지녀야 할 때를 우리 모두 맞게 되었다. 경제의 여유를 누리면서도 진정한 삶의 여유를 누리지 못하게 된 현대인의 궁핍함을 간파할 수 있고, 인간의 편리 때문에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녹색 감수성을 지닌 사람,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공공의 영역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책임으로 느끼는 사람, 그가 바로 녹색 시민이다.

(2) 성장과 개발의 속도에 홀려 녹색 관심과 녹색 시민의 참여를 방해 세력으로 몰아붙이기보다는, 성장과 개발이 저지를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생태 의식의 여유로움'을 값있게 생각하는 의식의 재편이 필요하다.

(3) 이러한 시민은 단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녹색 시민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훈련되어야 한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지역 조직에서, 국가 기관과의 협력 활동에서 자라고 익어가야 한다.